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49
----------	-----

2024. 11. 25.(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나.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1월 18일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산림국장)

가. 제안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2024.1.1.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목의 변경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새롭게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가.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목을 변경함(안 명칭)
 - (기 존)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 (변 경) 충청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조례의 사용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정 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를 따름
-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순환경제사회 시행계획 수립과 성과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나. 검토내용

- 조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입법평가 결과 등의 반영을 통해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임.
 - 충청북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자원순환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시행계획 수립, 통계조사, 성과관리 및 지원 등)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타법을 침해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없음

-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3.12.2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2022. 2.1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2022. 4.1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2022. 2.2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2024. 2.2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2022. 4.1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2021. 5.2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4. 7.12.
경기도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4. 7.18.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4. 6.20.
충청남도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4. 5.10.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2023.12.08.
전라남도	전라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4. 4. 4.
경상북도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2021. 7.15.
경상남도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2023. 8.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2024. 3.18.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준용함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다른 조례와의 부합 관계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6조는 순환경제시행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조례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전부개정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자원순환의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법리적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반 또는 침해되는 사항 없이 목적에 적합한 내용만으로 규정함.
- 또한, 충청북도의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당한 절차를 따름.
- 종합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49
----------	-----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2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제명의 변경,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
 - (개정) 충청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안 제5조)
- 순환경제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안 제6조부터 제8조)
-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및 재정지원(안 제9조부터 제10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

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 발생 예측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전략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순환경제사회산업의 육성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 장 등이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시·군의 이행 실적을 반영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0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 내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자원순환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육 등)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

합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3. 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순환경제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사업 규모,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및 그동안의 목표 달성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설정에 필요한 자료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제7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4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 순환경제 시행계획 연구용역 수행
- 순환경제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수행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수당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11조제2항에 근거 시·도지사는 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후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제6조(시행계획 수립)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 요인 : 순환경제시행계획 연구용역비 등 143,650천원 정도 소요
- 추계의 전제
 - 순환경제시행계획 연구용역 1식('27년도 예산 수립 후 진행)
 - 순환경제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27년도 예산 수립 후 진행)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개최 및 수당(5명) 지급
- 추계결과
 - 순환경제시행계획 연구용역 : 125,500천원
 - 순환경제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 18,000천원
 - 순환경제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위원 수당 : 150천원
 - 산출기초
 - 순환경시행계획 연구용역 125,500천원 x 1식 = 125,500천원
[기수립 용역비('23~'27년도) 125,500천원 소요 참고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18,000천원 x 1식 = 18,000천원
[기수립 용역비('23~'27년도) 18,000천원 소요 참고 작성]
 - 위원회 위원 수당 30천원 x 5명 = 150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 기 수립 자원순환시행계획은 '23~'27년까지로 '28~'32년 시행계획 재수립하여야 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43,650		143,650
순환경제시행계획 연구용역				125,500		125,500
순환경제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 연구용역				18,000		18,000
순환경제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위원회 수당 등				150		150
재원 조달						
자체 재원	연구 용역			143,500		143,500
	수당			150		15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